

여수박람회 마스터플랜 내용과 문제점

100m 상징탑 빠져 '랜드마크' 시민 염원 물거품

지역문화 프로그램 전혀 없어
교통·숙박 등 사후 활용 방안 부족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1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생산한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시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구체성과 내용이 부실했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던 탓인지 기본 철학과 방향조차 명쾌하지 못하다는 평이다.

○랜드마크 제외 등 미흡=참여정부 때 약속한 100m 상징탑이 계획에서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조직위 측은 오션타워와 함께 50m 높이의 스카이라인로 대표적 상징물로 구상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또 차별성이 부족하고 지역민과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경하 중앙대 교수는 "어떤 한국의 이미지를 외국에 전달할지 머리에 안 들어온다"며 "해륙국가로서의 문화적 차별성을 드러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평했다.

이상훈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감사는 "마스터플랜에 인본주의가 안 보이고 개발 논리가 흐르고 있다"며 "여수의 정체성과 문화,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역을 보여주는 문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평했다. 그는 또 "시설과 주제 모두 계획 자체가 산만해 짜임새가 없고 구심점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교통·숙박·사후 활용 계획도 부족=유치 단계에서부터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분으로서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마스터플랜에서는 주제와 전시에 비해 대단히 소홀히 취급했다는 평을 받았다.

사후 활용 방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후에 운영하게 될 주제관과 한국관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이 투자한 뒤 운영해야 하나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숙박시설을



25일 서울 현대 계동빌딩에서 열린 '2012 여수엑스포 마스터플랜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청회장 외부에 전시된 조감도를 관람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해양,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전문가로 전략기획단을 구성, MIT 도시계획 전문가와 공동워크숍, 각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 시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민간이 운영하게 될 경우의 수익모델도 제시하지 않았고, 민간투자유치 가능성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숙박시설의 경우 박람회기간 중 최대 1천만명에게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고급 숙박시설은 민자유치, 일반 숙박시설은 호텔 등 기존 시설의 정

비 개선을 통해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숙박 수요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이에 따른 구체적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통의 경우도 관광객 접근로를 추정, 이에 따른 수요를 예측해서 교통망 계획

이 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공청회를 지켜본 김성곤 의원은 교통과 숙박문제와 관련, "다양한 남해안 쿠르즈 상품을 개발, 육상 도로망과 숙박시설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자"며 "대형 쿠르즈 수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람회 고위자문단 구성

한덕수 전 총리·김재철 회장 등 21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최 준비 과정을 자문하고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고위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관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등 각 분야에서 경륜을 갖춘 21명의 인사가 참여한다.

정부와 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위원회 고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형국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 오명 건국대학교 총장, 홍승용 인하대학교 총장이 언론계에서는 엄기영 한국방송협회 회장, 장대한 한국신문협회 회장이 자문위원을 맡았다.

문화·예술계 인사로는 김종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 손진책 극단 미추 대표, 이어령 중앙일보 상임고문, 이원복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표재순 제이에스씨어터 대표가 참여한다.

여성계에서는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과 최태지 국립발레단 단장이, 여수·전남 인사로는 강정채 전남대학교 교수와 신철호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활동한다. 외국계 인사로는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

고위자문단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선산업 무너지면 지역경제 위기
민주당이 앞장서 지원책 마련해야”

■ 민주-광주-전남 정책협 밀 논의했다

2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광주시·전남도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아래 추진되어 오던 각종 주요 사업들이 새정부 들어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중소형조선소 육성,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전략사업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으며,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지역 현안설명에 나선 박 지사는 금융권의 대출 중단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지역 중소조선소들의 현실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04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소형조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각고의 기업유치를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권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한 중형조선소는 조만간 부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으며 또 다른 업체도 시설 설비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또, 최근 지역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지역 중소조선소가 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부 세력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그같은 현상은 국가적으로

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너무나 잘 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J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새정부가 당초 개발 예정면적의 1/3수준인 1천만 평의에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도 "새정부 들어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백지화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에 강력 요구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철단의료복합단지, 광주와 전남지역이 최적지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전임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재검토해 다시 시행하는 것은 인심을 다시 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록 의원은 박 시장과 박 지사의 현안설명에 대해 "고용인원이 1만여 명에 이르는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공동성명 형태로 정부에 건의문을 발표하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대표는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인 때와는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달라졌다"며 "과거에는 광주시와 전남도와 중앙정부와 쉽게 소통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민주당과 국회의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 난개발 방지 '친환경 개발 조례' 제정

정가 브리핑

○전남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지역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를 제정했다.

26일 공포되는 이 조례에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제품을 활용하도록 했으며,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 일부를 감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남도는 또 친환경 농수산물

이용한 도내 음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조례'도 함께 제정해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시·도의장협 임시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5일 포항에서 제5차 임시회를 갖고, ▲지방의원 상해 등 보상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의 건 ▲인사권 자율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행안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과 관련,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내용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광주시·전

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광주시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협의회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예고

○오는 2010년부터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이 확대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의원들의 영리 행위 제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 /채희중·김지을기자 chae@



Advertisement for S-MOVILION Grand Open.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ar and a display board. Text includes: '광주 S-MOVILION Grand Open', '세계의 명차, 이제는 SK를 통해 만나십시오.', '세대의 명차를 구매하는 새로운 방법', and '광주 S-MOVILION TEL: 525-3535, 060-911-3535'. There is also a small inset image of a car's interior.